

##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 논문요약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혜정전략이 요구된다.

**주제어** : 전략적 경쟁과 갈등, 전략·경제대화, 현안문제, 트럼프-시진핑 시대, 혜정전략

## I. 서론

21세기 들어 G2시대, 차이메리카(Chimerica) 또는 차메리카(Chamerica) 등의 용어가 시사해주듯이, 오늘날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영준 2015). 최근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話頭)는 미중관계의 변화이다. 현재 국제정치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학문적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은 미중패권경쟁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 건설을 두고 군사적 대치상황을 연출해왔으며 미군의 사드의 한국배치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을 사이에 두고 양국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관옥 2016, 1).

21세기 들어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는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정권출범이후 일대일로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해군력도 크게 팽창하고 있다. 21세기 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동안 중국은 급속히 경제성장을 하면서, 차분히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일견, 미국의 세계전략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 협력기구)를 강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와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은 이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우호적인 관계와 영향력을 증진시켰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북핵문제에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주관하면서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2003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수립하였다. 일본과도 2000년대 중반이후 빈번한 정상외교를 통해 2007년 ‘전략적 호혜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김홍규 2009).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거의 10%에 달하는 평균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으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2008년 독일,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영향력 증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집권초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부시행정부는 2005년 드디어 중국을 ‘지역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거부했던 전략개념을 사용한 외교안보대화를 시작하였고, 경제대화 역시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당시 ‘전략대화’라는 명칭 대신 ‘고위급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중국은 이를 ‘전략대화’라고 지칭하였다. 이후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략대화’ 개념을 수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은 미중관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긋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09년 발생한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엄청난 손상을 야기했다. 세계경제의 위기가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자체에서 발생했고,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 스스로 이를 수습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급속히 증대되었고 중국의 대외적 자심감과 민족주의적인 자부심도 크게 고양되어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구조적 변화에 따른 미중간 경쟁관계는 국제질서의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주요국제회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전략경제대화 및 안보대화까지 통합한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가 되었다(김홍규 2017).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 질서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이태환 2013). 미·중 양국 지도자들이 그들의 동맹국들과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하는 문제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특히 동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

위협론에 기초한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바로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김태운 2009, 33).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국력 및 국제적 동맹국들의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양국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거대한 두 국가가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이나 대규모 전쟁이 필요 없는 관계를 이룩한다면 이 또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미래를 알고자 하거든 먼저 지난 일을 되돌아보라(欲知未來 先察已然)”는 말이 있다(추적 & 박세무 1993, 46). 과거-현재-미래는 연관되어 있어 미래예측·대비를 위해서는 어제의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역사적 연구접근방법의 본질은 그 사실의 개별성, 즉 일회적이며 되풀이되지 않는 특이성과 더불어 발전하며 지속되는 반복과정을 파악하는데 있다(김명기 & 김운태 2000, 35).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중관계의 추이를 고찰함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상업적 이해를 기반으로 시작된 미중관계사와 관련해서 특정 행정부이후의 미중관계를 다룬 논문은 있으나(손병권 2010, 1-19), 초기부터 현재까지 양국관계사를 개관한 논문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와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 미중시대의 주요현안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 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양국관계사를 시대별로 세분·개관한 후 현 트럼프-시진핑 미중시대의 주요현안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II.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 1. 초기의 미중관계: 통상 및 미국의 대중차관·군원제공(1844~1949)

미중관계의 역사는 중국이 청국(淸國)이라는 전제군주제 국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17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상인들이 중국 항로개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84년 2월 뉴욕항을 출항한 성조기를 단 ‘중국황제호’는 동년 8월에 광둥항에 입항하였다. 이때는 미국에서 모피, 인삼 등을 가져가 중국에서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수입하며 큰 이익을 보았다. 그 후 미국상인들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미국상인들은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등 대(對)중국무역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박일훈 1981, 3-4). 이후 중국은 미국을 외교적 우방으로 대우했고 미국상인도 중국에 진출한 다른 열강의 상인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들의 지위가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인, 미국인과 같은 외국상인들에 있어서 교역은 수익성은 좋았지만, 생명·재산·교역권·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정치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행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역봉쇄를 당할까 두려워 누구도 이를 참견하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선장 존 헨레이(John D. Henley)가 이끄는 콘그레스(Congress) 호(號)가 1819년 11월 3일, 네이링딩 섬(內伶仃島, Neilingding Island)에 도착함으로써 미국 해군함정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 전함의 도착에 중국관원들이 놀라자, 선장은 주강(珠江)에 진입하지 말 것을 명했으나 미국공사(公使)가 중국(당시 청나라)의 아무런 제지도 없을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헨레이 선장은 대담하게도 그 배에 보급품을 채우기 위해 진입하였다. 그 후 1830년 1월, 윌리엄 핀치(William B. Finch) 중령이 이끄는 슬로프형 포함(砲艦) 빈센스(USS Vincennes)호는 미국 최초로 세계일주를 한 선박이기도 했는데(Wikipedia 2017/10/31), 광둥에 2주를 넘게 정박했었다. 당시 그곳에 있던 미국

상인들은 편치 중령에게 매년 해군이 방문하여 중국세관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보이고 유화적인 성향을 나타내줄 것을 조언하였고 편치 중령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군성에 보고하였다(위키백과 2017/11/20).

한편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1차 아편전쟁(제1차: 1839~1842, 제2차: 1856~1860)에서 영국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중국은 영국의 개항요구를 받아들이고 불평등조약을 맺어야 했다. 중국은 다른 서구열강과도 불평등조약을 통해 국력을 착취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중(청)관계가 처음 맺어지게 된 것도 제1차 아편전쟁 후인 1844년 7월 3일 마카오 교외의 망하(望廈, 왕샤) 마을에서 체결된 망하조약을 통해서이다. 미국은 이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여 치외법권 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조약은 양국간의 통상조약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바 이 조약에 기초한 양국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로 보기 어렵다(이명식 1980, 607).

여하튼 미국도 청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열강으로 성장해갔다.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太平天國運動, Taiping Rebellion, 1851~1864), 의화단운동(1899~1901) 등에서도 미국은 서양연합군측에 참여하여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얻어내고 이권침탈에도 동조하여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860년대 이후 서구열강 중의 하나인 미국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열강들이 착취에 치중하는데 반해 미국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바라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우호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중국에 있어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느 열강과는 다른 정의와 배려를 가진 나라로 비쳐졌다(주재우 2017).

미중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은 19세기 말엽인 1899년이다. 1898년 미서전쟁(America-Spanish War)의 결과, 미국이 필리핀을 획득했고 이어서 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관심이 많았으며, 중국 대륙에서의 열강국간의 통상로 개척을 위한 경합관계를 주시해오던 중, 1899년에 문호개방을 대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중국내에서의 미국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열강국과의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통상관계를 관

철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은 중국 청(淸)나라 말기에 일어난 외세배척운동으로 1900년 6월, 베이징에서 교회를 습격하고 외국인을 박해하는 따위의 일을 한 의화단을 청나라 정부가 지지하고 대외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의 연합군이 베이징을 진압하고 점령한 사건이었다(김용구 2006). 당시 미국은 중국과 체결한 조약을 통해 미국 스스로의 이권보호에 주력했다. 러일전쟁(1904~1905)이후 일본이 세력확장 정책을 추진하려 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견제하기 위한 도의주의적(道義主義的) 외교관계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중국에 차관(借款)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수단을 통해 일본의 북방정책을 견제하려고 했다(이명식 1980, 607).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1911년에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탄생을 보게 된 중화민국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대중관계는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중국을 지배하는 공식적인 정부는 쑨원(孫文)이 세운 ‘중화민국’이라는 정부였고, 미국은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1910년대의 미중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화민족주의와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결부된 점이다. 미국은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외교를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미중관계는 윌슨시대에 비해 냉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워싱턴회의(1921~1922)에서 일본이 대미화해방향으로 이행(移行)하고 중국내부가 군벌혼전(軍閥混戰)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이명식 1980, 608). 청나라 멸망이후 중국은 지방에서 다양한 군벌들이 자신만의 정권을 수립하여 혼란스런 정국으로 이어지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하강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중화민국이 군벌들을 몰아내고 중국전역 지배권을 확보하자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대중 관심도는 다시 상승했다. 1931년 18월에 시작된 만주사변으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미 국무장관 스티imson(H.L. Stimson)은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에 대해 불승인정책을 선언했다. 그 후 중일전쟁(1937~1945)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의 중국침략을 무력개입을

통해 저지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1938년 12월에 2,500만불의 대중차관을 단행하는 대중지원을 행동화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개시와 함께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일전투에 참가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으며,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장개석 정부는 1945년 8월 일본군의 항복시까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역시 두 차례 모두 연합군으로 참전한 터라 미·중 양측은 상호간의 신뢰속에 강력한 우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적해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기에, 미국과 중화민국은 같은 전선을 공유하며 일본에 대응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이후 중국은 중국 땅에서 일본을 몰아냈지만 이번에는 내분에 휩싸였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쳤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분열해 싸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갈등·분열 등으로 중국의 정국은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전후 국공내전(國共內戰)의 격화는 미국의 대중정책에 복잡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미국은 국공내전의 조정자로 마셜 사절단을 파견했지만 1947년 1월 조정에 실패했고, 1949년 10월 중공(Chinese Communist Party)정권이 성립될 때까지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정관적(靜觀的) 태도를 취했다. 1949년 8월 5일 미국무장관이 발표한 『중국백서(*The China White Paper*)』는 국민당 정부의 패배는 국민당정부의 부패 때문이지 미국의 정책이 부적당했다든지 원조가 불충분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이명식 1980, 608).

## 2. 중공정권수립과 한국전참전 후 대립관계(1949-1969)

중국의 국공내전에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권의 맹주였던 미국은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전쟁에서 비공식적으로 국민당을 지원했다. 국공내전시 미국이 장개석 국민당정부를 지원하자 중국공산당 내에서 반미감정이 대두되



었고 미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했다.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낸 공산당이, 병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국민당에게 기적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1949년 말, 주중 미국대사관은 장개석(蔣介石)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철수했다. 미국이 지지하던 국민당은 타이완(臺灣) 섬으로 건너가 중화민국정부를 수립했고, 공산당은 중국본토에 남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는 공식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중화민국과만 외교를 계속했다. 국공내전과 조정(調整)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던 미국은 중국본토에서 대만(Taiwan)으로 옮긴 국민당 정부를 정통정부로서 인정했고,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대표도 국민당 대표만으로 한정·사실화했다. 따라서 전후냉전체제 속에서의 미국의 대중공정책은 적대관계 일변도로 지속되었다. 1950년대 동서블록화시대가 되면서 미·중간 대립관계도 지속되었다(외교부 2016, 75).

1950년 6·25전쟁(Korean War)이 터지고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은 중공과 적대관계를 공식화했다. 6·25전쟁에서 중공군의 참전은 미중관계를 결정적으로 대립관계로 변화시켰다(이태환 2013; Fairbank 1959). 미국주도의 유엔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했고, 미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활동봉쇄에 노력을 기울였다. 6·25전쟁 발발후 1950년 10월 의용군을 명목으로 한 중공의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공 적대의식이 명확해지자 1951년 2월 유엔총회는 미국의 제의로 중공을 침략자로 결의했고, 그 후 중공을 소련(현 러시아)의 식민지정권으로 간주하고 봉쇄정책을 지속했다(이명식 1980, 608).

1951년 9월 8일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연합국과 일본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체결 당시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로 중공과 대만은 초대받지 못했으며, 소련은 당시 미국과 영국이 준비한 초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명에 반대했다. 이에 중공은 동년 8월 15일에 이 조약은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약의 초안에서 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와 남위도(南威島) 역시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중사군도(中沙群島, Macclesfield Bank) 그리고 동사군도(東沙群島, Pratas

Islands)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국영토의 일부라는 영유권을 주장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한국전쟁시 미국에 참예한 군사적 대결을 벌인 중국은 소련의 든든한 지원국이자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을 위협하는 세력인 동시에 동남아시아로 사회주의 세력확대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과 억제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으로 적대시하여 중국의 유엔가입에 반대하고, 대만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1949년에 설립한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의 분과위원회로 1952년에 ‘대중국수출조정위원회(CHINCOM)’를 발족시켜 대공산권뿐만 아니라 대중국 경제봉쇄정책을 추진했다(김택연 2016, 51).

1950년대 초반까지 반공산주의 일변도를 대극동정책의 핵심으로 미국의 대중공관은 극도의 적대관계로 집약된다. 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민중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공정부의 승인은 물론 무역·문화정책도 결코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 당시 미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덜레스 국무장관의 뒤를 이어 러스크(Dean D. Rusk)가 1961년에 들어선 케네디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되면서부터 ‘중공정권이 압정의 결과 밑으로부터 저항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승인과 유엔가입에는 반대하지만 미중간의 비공식 접촉과 군비축소나 핵무기확산방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이명식 1980, 608; Fairbank 1983).

한편 1959년 이후 명백해진 중소분쟁, 1965년 2월 미국의 북폭개시(北爆開始)에 따라 확대된 월남전쟁, 1966년부터 홍위병의 등장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끈 문화대혁명 등은 각기 미중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Wikipedia 2017/10/10). 중공은 이 기간에 ‘미제(美帝)’를 인류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소련을 ‘미제와 야합한 현대판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중공은 대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몰두하면서 인도지나반도에서의 민족해방전쟁의 지원공세를 펼쳤다. 인도지나반도에서의 중공의 민족해방전쟁의 지원공세로 월남전에서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미국은 결국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월남전의

월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와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방어진략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 III.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의 미중관계

#### 1. 1960년대 후반 미중접근과 1970년대 관계정상화(1969-1979)

미중관계는 냉전기류가 조금씩 풀리면서 개선되기 시작했다(Frankel 1969). 1960년대 후반 중소분쟁 격화에 따라 중국은 미국 대신 소련을 제1의 가상적(敵)으로 간주하고 대소(對蘇) 전략상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 취임이후 대소(對蘇)전략상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은 아시아의 지역세력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외교부 2016, 75). 괌 독트린(Guam Doctrine)의 발표가 있는 직후인 1969년 12월 미국은 미국계 외국회사들이 비전략물자를 중공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대중공통상(對中共通商)에서의 전면금수를 해제했다(경향신문 1971/06/10, 1).

물론 미중관계개선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중은 1955년 제네바회담이후 1970년 1월 20일 바르샤바회담까지 대사급 회담을 136회나 개최하여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제반현안문제를 협의하고 기타 국제문제에 관한 양국간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해왔었다(외교부 2016, 75).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70년 3월 미국은 중공·쿠바·북한 등 적성공산국가에 대한 여행제한 발표에서 중공에 대해서만은 정당한 목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여행을 허가했다. 그 후 1971년 2월 닉슨은 「대외정책에 관한 세계교서」에서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동년 3월 15일 중공여행제한 전면해제를 발표했다. 특히 동년 4월 10~17일은 미국 탁구팀이 중공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이미지를 급선회시켰다(이명식 1980, 608).

때마침 제26차 유엔총회에서는 1971년 10월 21일 중공을 유엔가입

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유중국(대만)을 유엔으로부터 축출하자는 알바니아의 안을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 불참 3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국민당정부의 유엔의석 유지를 위해 2중대표제표결권을 주장하며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미국의 제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Wikipedia 2017/10/12).

닉슨행정부 출범(1969.1.20)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과 동시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로 미중관계는 급회전하게 되어 급기야 1972년 2월 21~29일 닉슨의 중공방문으로까지 발전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며 미중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미중간 공동인식에 기초한 ‘상하이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즉 ①평화공존원칙에 입각, 패권추구 반대, ②제3국 대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양국관계의 정상화, ③대만이 중국의 일부임과 중국인 자신에 의한 대만문제 평화적 해결 필요성의 인정, ④정세추이에 따른 대만 주둔 미군(美軍)철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하이(上海)공동성명(1972.2.28.)이 바로 그것이다(외교부 2016, 76).

닉슨·저우언라이(周恩來)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중간에는 사회제도와 외교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쌍방은 모든 국가가 그들의 사회제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주권·영토보전의 존중, 타국에 대한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평화공존에 입각해서 상호관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진진은 모든 나라의 이익에 합치됨을 강조하고, 쌍방은 어느 쪽도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느 다른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의 패권쟁취노력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공동성명내용은 국제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 한 미국의 정책과 이에 호응한 중국의 입장이 일치될 수 있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이명식 1980, 608).

그 후 1978년 5월 미·중은 양국간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고위급 외교관을 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사실상 대사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만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미·중간 외교관계수

림이 지연되다가 1978년 12월 ‘수교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1979년 1월 1일부로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이 날은 공산주의권의 중국과 자본주의권의 미국의 공식적인 수교로 양측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그 후 1979년 3월 1일 양국의 상주대사관이 설치되고, 1979년 3월 7일 미국 초대대사 레오나드 우드콕(Leonard Woodcock)이 베이징에, 1979년 3월 1일 중국 초대대사 양택민(梁澤民)이 워싱턴에 각각 부임했다.

수교공동성명은 ①1979년 1월 1일부로 양국의 상호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②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과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인정(acknowledge)과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대만과의 문화(文化)·상무(商務) 및 기타관계의 계속유지, ③양국의 패권 불추구와 다른 개별국가나 국가그룹의 패권추구 노력에의 반대, ④양국의 제3국을 대신한 협상금지과 제3국을 겨냥한 상호협정 체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외교부 2016, 76).

중국(중공)은 대만과 국교를 맺은 국가와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중국과 대만 모두와 국교수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유엔은 대만(중화민국 또는 자유중국)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받아들였으며, 미국도 1979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관계를 시작했다. 유엔으로부터 대만의 축출은 그동안 대만이 지속해오던 우방국가들과의 유대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이명식 1980, 608). 대만의 미국과의 단교이후 1954년 12월에 체결된 미-대만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고 대만 주둔 미군도 철수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하여 첨단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훈련에 미군을 참관시키는 등 군사협력관계를 간접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Wikipedia 2017/10/22).

미국은 1979년 1월 1일부로 「대만관계법」을 채택하고 동년 4월부로 서명했다. 이 법은 미중간 관계정상화이후 미국과 대만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적 근거로서 채택한 것이다. 이 법은 상업적·문화적, 그리고 여타 양국간 인적 교류의 지속 및 대만에 대한 방어적 목적의 무기의 지속적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대

만관계법」을 통해 ‘One China Policy(하나의 중국정책)’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대만과의 기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계유지 및 무기판매를 통한 대만안보에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다(외교부 2016, 76). 따라서 미국의 대만정책은 중국으로부터 언제든지 도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바 현재보다 유리하게 대만문제와 관련한 미중관계가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2. 1980~90년대 미중관계: 냉각·악화·재정립속의 G2전략대화 모색

1979년 12월 소련은 중동지역에 공산주의 정부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살상무기 및 군수품 수출인정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출범(1981.1.20)이후 대만에 대한 신무기 공급정책으로 미중관계는 냉각되었다. 미국이 1981년 12월 9,700만불 상당 F-5E 전투기 엔진부품 등을 대만에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1982년 1월 대만과의 F-5E 공동생산, 노후기 교체 및 부품판매 방침을 결정하자, 동년 3월 중국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판매에 반대를 표명하고 대미관계 격하를 시사했다. 그 후 동년 8월 17일 미·중 공동성명(일명 ‘8·17 공동성명’) 발표로 양국관계 재정립 기반구축 및 미·중·대만관계의 현실적 해결계기를 마련했다(외교부 2016, 76-77). 8·17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대만은 중국의 일부), ②미·대만간의 비공식관계 계속유지, ③상호간 주권 및 영토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④중국은 대만문제가 국내문제임을 재확인, ⑤미국은 대(對)중국관계를 중시하며, 2개의 중국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⑥미국의 대(對)대만 판매무기는 기술수준면에서 중국과 수교이래 최근 수년간 대만에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⑦미국은 대대만 무기판매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며, 일정기간 경과 후 대대만 무기판매 중단, ⑧양국정부는 일정기간에 걸쳐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타결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과 여건조성에 모든 노력경주, ⑨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경제, 문화, 교

육, 과학, 기술 및 여타분야에서의 유대관계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외교부 2016, 77).

그 후 1985년 이래 중·소 관계개선과 중국의 독립자주외교노선 강화에 따라 미·중간 전략적 이해일치의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1989년 6월 천안문사태(위키백과 2015/09/29)이전까지 미·중 양국관계는 고위인사 상호교류,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 교류증대 등 전반적으로 안정속에 꾸준히 진전되었다. 특히 중국 건국후 최초로 1986년 11월 미국 함대의 청도항(靑島港) 기항 등 군사관계도 증진되었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사건이후 미·중 양국간 상호제재와 보복조치로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미국은 대(對)중국 무기금수, 군고위인사 교류동결, 정부고위인사간 교류동결, 국제금융기관의 대중국 용자연기요청 등 대중국 제재조치를 시행했고, 중국은 대미강경비난을 계속하면서 미 해외공보방송(VOA) 특파원 퇴거, 풀브라이트사업 중단 등 대미보복조치를 시행했다

1990년에 들어 미·중 양국은 양국관계의 개선을 시도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나친 고립방지를 위해 실리외교에 기반한 포괄적 포용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으로 관계회복을 추진했다. 1990년 5월 및 1991년 6월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지위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중국도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자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신뢰증진·문제감소·협력발전·대립회피(增加信任·減少麻煩·發展合作·不搞對抗)라는 ‘16자원칙’에 따라 대미관계개선을 시도했다. 중국은 VOA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특파원 입국허용(1989.12), 베이징 일원의 계엄령 해제(1990.1.11) 및 천안문 사태 관계자 석방, 중국의 대규모 무역사절단 방미(1990.10) 및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가입(1992.3) 등의 조치를 취했다(외교부 2016, 77-78).

1990년을 전후로 한 세계적인 탈냉전이후 미·중 양국관계는 상호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중국의 대(對)파키스탄 미사일 수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조치, 미국의 중국 2000년 올림픽 개최 반대, 미국의 중국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입 제동, 통상문제, 대만문제(1995년 5월 미국의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허용, 1995년 7~8

월, 1996년 3월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발사훈련) 등으로 협력과 대립상태를 지속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양국은 고위인사교류를 통해 상호대화와 협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천안문사태이후 1997년 10월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그간의 경색관계를 청산했다. 미·중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전략적 동반자관계(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 추진노력에 합의했다(모종혁 2010).

다음해인 1998년 6월 클린턴 미(美) 대통령도 방중을 통해 핵확산 억제,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안보문제 등에 있어 미·중간 전략적 대화를 통한 공동협력의지를 과시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해결에 있어 양국간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안정적 관계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즉 ①전략핵 상호 불(不)조준 합의, ②한반도 평화·안정유지를 위한 대화협력강화 합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후 미중관계는 1999년 5월 미국을 위시한 나토(NATO)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급속히 냉각되었으나, 1999년 9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과 1999년 11월 미·중간 WTO 가입협상의 극적 타결로 관계복원의 전기가 마련되었다(외교부 2016, 78).

## IV. 트럼프-시진핑시대 이전의 미중관계

### 1. 부시-후진타오 집권기의 미중관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2001.1.20) 후 2001년 4월 미·중 균용기 충돌,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미중관계는 한동안 다시 불편한 국면이 초래되었다. 그러다가 미중관계는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주도의 반테러 국제공조노력에 협조하면서 일정부분이 회복되었다. 위기에 처한 듯 보였던 양국관계는 또다시 공동의 적을 만나면서 복원된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



쟁에 나섰고, 당시 신강지역의 무슬림 분리독립운동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은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다시 순풍을 타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중동정책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던 중국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내놓기도 했다(유일 2017).

9·11테러이후 미·중 양국은 수차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 협력관계’의 궤도에 진입했다. 2005년 1월 20일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미국조야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대두되었으나, 중국측은 미·중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05년 8월 제1차 미·중 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다음달 9월 유엔(UN)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05년 11월 부시 대통령의 방중시 ‘미·중간 건설적 협력관계 지향’에 합의했다. 그 후 2005년 12월 제2차 미·중 전략대화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2006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미시 새로운 관계설정 이 모색되기도 했다. 즉 중국측은 자신의 부상을 인정하고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미·중간 전략적 대화·협력(상호존중·대화·협력)의 필요성 역설했으며, 미국측은 중국을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칭하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투명성 제고, 인권개선 및 민주화 등 중국의 가치·체제전환을 촉구·압박했다(외교부 2016, 79).

G2(Group of 2)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G2” 참조)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중국과 미국은 이후에도 양국간 협의 메커니즘(mechanism) 강화를 통해 상호협력을 모색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제3차 미·중 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2007년 6월에는 제4차 미·중 전략대화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2007년 5월에는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2007년 12월에는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외교부 2012, 82).

그 후 미·중 양국은 2008년 1월 구이저우성(貴州省) 구이양시(貴陽

市)에서 제5차 미·중 전략대화를 개최했고, 이어서 동년 2월에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중했다. 이어서 2008년 6월 매릴랜드 아나폴리스에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The Fourth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sup>8)</sup>를 개최했고 2008년 6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다시 방중했다. 2개월 후인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부시 미 대통령이 방중에 이어 동월 베이징에서 제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 등 양국간 교류·협력을 추진했다(외교부 2016, 79).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발생으로 미국은 경제적 역량의 쇠퇴를 실감한 반면 중국은 30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친 고도경제성장으로 크게 부상했음을 실감했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양국간의 세력전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했다(Layne 2009, 147-172; Subramanian 2011, 66-78; Rachman 2011, 59-65;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Nye 2011, Chap.6; Drezner 2011).

## 2. 오바마-후진타오 집권기의 미중관계

부시 행정부에 이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2009.1.20)이후 미·중 양국은 외교장관 상호교환방문(2009.2, 2009.3)<sup>9)</sup> 및 2009년 4월 런던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의 안정적 우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관계를 ‘적극적·협력적·포괄적 관계’(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relationship)로 규정했다(외교부 2016, 79).

그러나 미·중 양국관계는 반전(反轉)으로 이어졌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지정학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의 저환율정책에 대해 오바마는 지속적으로 시

8) 양국은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사안과 천광칭 사태 등의 인권문제, 위안화 환율과 통상마찰 등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협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개선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신상호 2012).

9)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중(2009.2.20-22)과 양제츠 외교부장 방미(2009. 3.9-13)가 바로 그것이다.

정을 요구했다. 2009년 11월 15일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나눴던 가장 시급한 대화는 경제협력과 북한의 핵문제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2010년 1월 미국은 대만에 64억 달러어치의 무기판매를 제안했다(유일 2017).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6개월이 지난 2009년 7월 미·중 양국은 워싱턴에서 가진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The U.S. - 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를 통해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전략 대화와 경제 대화를 통합·격상하여, 미중협력의 포괄화, 체계화 및 대중(對中)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범세계적 문제해결의 동반자로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책임과 역할을 유도했다.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미·중 양국은 전략적 상호신뢰구축 및 심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했다. 여기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증대된, 강대하고 번영하는 성공한 중국을 환영하고, 중국은 아태국가의 일원으로서 역내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을 환영했다. 양국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지역적·세계적 도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조 의사를 표명했다(외교부 2016, 79-80).

2009년 11월 오바마-후진타오 공동성명에서 등장한 논쟁중의 하나가 바로 미·중간 ‘핵심이익(core interest)’이다.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 존중은 미중관계의 집진적 발전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 respecting each other's core interest is extreme important to ensure steady progress in US-China relations)”이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이익 논쟁은 2010년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클린턴(Hillary R. Clinton) 미국 국무장관간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이선진 2016, 3).

2010년에 들어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판매계획의 발표

(2010.1),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면담(2010.2), 무역분규 및 위안화 환율평가 질상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으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2010.4),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계복원이 함께 모색되기도 했다(외교부 2016, 80). 즉 미·중 양국은 2010년 5월 24~25일 베이징에서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및 세계의 경제, 글로벌·지역적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과 균형, 그리고 협력을 통한 이해관계 조율문제를 논의했다(박월라·나수엽 2014, 1-13).

2011년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미·중 양측은 공히 상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봉쇄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총체적 동아시아 외교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발표하고 이러한 전략의 추진과 함께 남중국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김택연 2016, 60). 그 후 미국과 중국은 2011년 5월 9~10일 워싱턴에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했으며, 중국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5월 10일 폐막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의 중국수출규제를 완화하고 미중상무연합회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키로 하는 등 이번 미·중 양국의 전략·경제대화(S&ED)가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홍찬선 2011).

그 후 2012년 2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방미시 처음으로 미·중간 상호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성적으로 대하고,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며,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New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Great Powers)’ 수립의 필요성의 제기했다.<sup>10)</sup> 그 후 2012년 5월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베이징),<sup>11)</sup> 2012년 5월 량광례(梁光烈) 국방장관

10)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도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했다(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16 “신형대국관계” 참조).

11) 미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3~4일 베이징에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

의 방미, 2012년 9월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 방중, 2012년 9월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 2012년 12월 왕치산 부총리의 방미 등 각 분야간 교류를 지속했다(외교부 2016, 80).

### 3. 오바마-시진핑 집권기의 미중관계

2012년 11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는 후진타오(胡錦濤)에 이어 시진핑(習近平)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키로 결정했다.<sup>12)</sup> 그 후 2013년 3월 14일 임기 10년의 중국 국가주석에 선출되었다(위키백과 2017/11/18, “시진핑” 참조). 이 무렵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 6일의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미트 롬니(Mitt Romney)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하여 2013년 1월 13일 재취임했다(외교부 2016, 80).

이미 2012년 2월 부주석으로서 방미시 ‘신형대국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 시진핑은 주석이 된 후 가진 2013년 6월 오바마와의 비공식회담에서도 ‘미·중 신형대국관계’수립을 제안했다.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수립제안에 대한 미국의 초기반응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 동년 12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작업개시, 2014년 초 서사군도 석유탐사선 진입 등 중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인 일대일로(해양실크로드 포함), AIIB(Asian Infrastructure

---

여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짓는 등 상호 관계 개선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내비치기도 했다(신상호 2012).

12) 중국의 제7대 국가주석이자 제5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제6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2012년 11월부터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집권 초기에는 반부패 전쟁 등으로 대중적인 이미지가 매우 좋아 중국 내에서는 시다다(習大大; 시씨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이후 지도자들이 시도하지 않던 1인 독재체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고, 더불어 그나마 숨통 트일 정도만큼은 있었던 중국의 사회적 자유화 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중국의 꼴은 북한이나 다름이 없다며 서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쓸 정도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나무위키 2017/12'01).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선언 등 일련의 중국의 공세적인 대응이 이어지자 미국은 중국이 제안하는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예컨대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첫 방문시 수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이견으로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반면 중국은 언론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방미성가로 ‘미·중 신형대국관계’ 합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넓어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해 이를 미국 해양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 카터 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세계해양패권과 동아시아지역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항행자유작전’의 세 가지 목표는 ①항행의 자유의지 과시, ②남중국해 군사화 방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미국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강화임을 강조했다(이선진 2016, 4-5).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재취임한 이후 2013년 3월 코언(David Cohen) 재무차관 방중, 2013년 4월 케리 국무장관, 번스 국무부 부장관, 램시 합참의장의 방중, 2013년 5월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 등 각 분야간 교류가 지속되었다. 2013년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방미(캘리포니아 서니랜즈)했고, 제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워싱턴, 2013.7),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방미(2013.8), 유엔총회 참석계기 왕이 외교부장 방미(2013.9), 헤이글 국방장관 방중(2014.4), 왕자루이(王家瑞) 중련부장(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방미(2014.5),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및 제5차 인문교류 고위급협상(베이징, 2014.7),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방중(2014.9),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미(2014.10),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방미(2014.10) 등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4년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을 계기로 파리(Paris)기후변화협약체결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양측간 공조노

력을 확인했다. 즉 ①양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단호한 추진, ②미·중간 조율과 협력의 강화, ③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저탄소·기후탄력적(climate-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결의합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서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방미(2015.2), 케리 국무장관 방중(2015.5), 판창룡(范長龍)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미(2015.6),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및 제6차 인문교류 고위급협상(워싱턴, 2015.6),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방중(2016.8),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미국 국빈 방문(2015.9),<sup>13)</sup>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국무부 장관 방중(2015.10) 등 미·중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외교부 2016, 82, 87).

그 후 2015년 11월 파리 기후변화 총회를 계기로 가진 미·중 정상 회담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2번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후 케리 국무장관 방중(2016.1)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미(2016.2)에 이어 2016년 3월에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방미하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3번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V. 트럼프-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주요현안 및 시사점

### 1. 트럼프의 취임과 시진핑의 재집권

지난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앞으로 모든 대내외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13) 지난 2015년 9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뜻을 함께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대통령은 중국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번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모두 부합되는 것이며 중국이 세계무대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양국간의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상호존중,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 공영의 실현이 현재 중국 외교정책의 우선방향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불과 1개월의 시간이 흐른 10월 27일 미 해군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이 영해로 간주하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주비자오(諸碧礁)의 12해리(약 22km) 안쪽 해역에 들어가 항해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김택연 2016, 42).

First)’를 천명하고 보호무역주의와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동맹국과의 방위비 재협상을 예고했다. 또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역외군형전략으로 집약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재관 2017, 119).

2017년 10월 23일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폐막되었다. 제19차 당대회의 화두는 두 가지이다. ‘시진핑 1인 절대권력 구축’과 ‘강한 중국건설’이다(한국일보 2017/10/24, “시진핑 절대권력 구축, 더욱 험난해질 한반도 안보환경(사설)” 참조). 시진핑은 21세기 중엽 세계일류 군건설 ‘강군몽(強軍夢)’을 천명했다(박재윤 2017).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는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형국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등소평이후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낸다)의 기초를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 분발해 성과를 이루어낸다)로 변환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진방 2017).

제19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치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당장(黨章: 당헌)에 삽입되었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도이념이 명기된 것은 마르크스·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뿐이다. 시진핑 주석이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를 능가하는 절대 권력자의 위치를 굳혔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후의 후계구도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아 시진핑시대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한국일보 2017/10/24).

2017년 트럼프 취임과 시진핑 재집권이후 최근 국제정치의 핵심화두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의 집권2기의 더욱 강화된 권력의 출현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중국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



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와 탐색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2016년 12월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를 건드렸고, 2017년 1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포함한 모든 것이 ‘협상대상’(under negotiation)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경제적 카드도 내비치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결정 라인의 인선 역시 대부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여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구성했다. 이처럼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온 트럼프행정부는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신중호 2017, 1).

중국정부는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에도 ‘평화적 발전’(peaceful development)이라는 대외전략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의 유발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정당한 ‘핵심이익’(core interest)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했고, 트럼프의 잇따른 ‘대만카드’ 활용시도를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미중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2017년 처음 발간한 『아태안보협력정책』 백서를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지난 2017년 1월 9일에는 중국의 H-6K 전략폭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도 했다(문예성 2017; 신중호 2017, 1-2). 중국은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한 시진핑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좀 더 공세적인 외교전략과 대미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신년사에서도 일대일로 건설과 세계평화의 건설자,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 등을 강조한 바 있다(人民網 2017/12/31).

## 2.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주요현안

미국과 중국은 외교, 군사안보, 해양, 무역, 금융, 사이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공간과 같이 새로운 분야,” “금융·무역과 같이 미국이 쇠퇴한 분야,” 그리고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 수용하지 않지만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미국의 ‘재균형외교전략’과 대등한 공존을 강조하는 중국의 ‘균형외교전략,’ 군사안보분야에서는 미국의 ‘전지역 접근전략’에 의한 아시아로의 회귀전략(트럼프 정부이후 인도·태평양전략) 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중심으로 미중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해양경쟁에서는 미국의 ‘대양해군전략’과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요새함대전략’과 ‘견제함대전략’의 충돌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전장이 될 사이버 영역에서는 ‘사이버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기득권 유지와 중국의 ‘사이버 주권’이 맞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의 금융경쟁도 치열하다. 즉 중국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NDB(New Development Bank, 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을 주도하여 미국주도의 국제금융·통화질서의 변화를 도전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와 G-20을 통해 그리고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의 주도를 통해 중국경제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역 1위국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무역분야에서는 양국이 각각 주도하는 지역경제공동체간에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패권 대(對) 에너지안보’로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통제권 밖에서 자원외교 등의 노력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구조적 변화에 따른 미중경쟁관계는 국제질서의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건 발생으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듯한 추세를 보이자 미중간 세력전이의 가능성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양국관계 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김관옥 2016, 2).

2010년 들어 미·중 양국간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달라이라마 문제, 대(對)대만 무기수출 문제, 이란핵문제, 동아시아문제(남중국해 영토분쟁, 천안함 사건 등) 등을 둘러싼 상호갈등이 대두되었다. 특히 중일간 다오위다오/셴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의 중국측의 무퇴한 행동, 중국의 ‘핵심이익’ 존중주장을 둘러싼 미국의 반발 등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특히 중국의 대외형태가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과 중국내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양국간의 경쟁구도가 더 강조되어 나타나기도 했다(김홍규 2017).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기본적으로 1951년 9월에 구축된 샌프란시스코체제(Calder 2014, 135-157)에 바탕을 두고 변화해왔다.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담보해왔던 관련 샌프란시스코체제는 1970년대 테탕트와 맞물린 미중관계 정상화, 1990년을 전후로 한 냉전체제의 종식,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대한 북한의 도전 등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겪어 왔으나 체제의 근본적 속성과 성격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보다 확연하게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일본관계를 기본축으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근본적이면서도 구조적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수형 2017, 38).

이러한 상황변화에 미국은 재균형(rebalancing) 혹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 ‘힘을 통한 평화’의 접근방법을 통해 우방국 및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신형국제관계)에 따른 핵심이익 사수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이수형 2017, 38-39).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이라는 미중의 안보적 상호작용은 그동안 휴지기 상태로 잠복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논쟁적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미해결된 영토문제, 일본의 재무장, 역사문제라는 쟁점들(Dower 2014, 1-52)을 가시적이면서도 동시적인 부활을 추동시키면서 이 지역을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목격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과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정학적 구조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이수형 2017, 39).

최근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심화는 국제정치의 주요화두가 되고 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해양패권추구 및 최근 한국 사드배치 반대주장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공세적 팽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7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중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패권경쟁이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상업물동량의 약 1/2, 에너지물동량의 약 1/3, 한국, 일본, 중국의 석유 수송량의 약 80~90%(한국 90%) 등이 통과하는 전략적 수송로이다(이지용 2016). 전 세계 해양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조혜리 2015).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을 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간의 해양갈등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쟁점이다. 동중국해는 우리의 해양

영토 이어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 어도 및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전략폭격기 비행을 하기도 한다. 셋째,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쟁점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갈등지역에 7개의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갈등관련 국가들과 미국은 이에 항의해왔다. 미국은 인공섬의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영해 안에 미 군함이 항해하고 있다(김강녕 2017, 11-12).

둘째는 북핵과 한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중갈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중간 협력과 갈등이 존재해왔다. 미국은 늘 중국의 대북제재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재 수준을 넘어 미중간 공조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데, 그 이유는 제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양 정상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이, 북한이 제2의 시리아처럼 미국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북한·중국·한국내부에 존재해왔다. 미국대선 당시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이후 상당히 변화무쌍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중공조이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공조와 관련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인 3가지 원칙 즉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②대화과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③한반도 비핵화 등이 달라질 것인지의 여부이다(김재관 2017, 152-154).

다음으로 사드의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4월 26일 전격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사드정국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鯨戰蝦死)’이 되어 버렸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에다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사드유지비용 10억 달러 압박도 받기도 했다. 사드배치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도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미국방당국자는 누차 강조해왔다. 그런데 사드배치 목적과 관련하여 유관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결국 대북견제용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환으로 괌-오키나와-성주로 이어지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일환으로써 다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arris 2016).

미국은 사드비용을 자국이 양보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거나 한미 FTA재협상카드를 활용하면서 빅딜식으로 우리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는 사드배치의 불가피성, 사드의 조건부 배치 가능성, 중국측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X-band Radar 가동중지 등 여러 협상카드가 존재한다. 여하튼 향후 미중을 상대로 한 사드문제는 외교적 난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김재관 2017, 151).

지난 2016년 7월 13일 한미의 사드배치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행보가 멈추지 않았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이를 미국과의 전략경쟁 또는 패권경쟁차원에서 비중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사드배치를 병참관계에서 특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발판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목표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소련봉쇄전략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사드배치를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유지해온 군사전략력균형의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더불어 동북아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중국은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강녕 2017, 14-15).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사드포위전략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필두로 탐지 레이더만 설치한 일본의 사드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고 이어 필리핀에까지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미국의 동아시아 사드배치의 전초전으로 보고 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미중간 그리고 한중간 사드로 인한 갈등은 현재 임시로 봉합된 상태지만 간단히 풀리기는 어려운 사안인바 이를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는 미·중 통상 및 금융질서와 관련된 경쟁이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NDB(신개발은행) 등을 창설해

IMF(국제통화기금) 등 미국중심의 금융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경제를 견제하기 위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미중간 통상마찰, 경제보복조치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마찰문제도 일단 자제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경제분야에서도 현상유지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재관 2017, 149).

미중 통상 및 금융질서와 관련된 경쟁도 우리에게 파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다. 현재 미국의 영향력은 15조달러를 넘는 경제(Mataloni 2011, 1)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GDP, 세계의 약 43%를 점유하는 7,110억 달러의 국방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위키백과 2017/05/20). 2017년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중국은 두 번째로 큰 국가이지만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측정한 중국의 GDP는 미국보다 더 크다(Wikipedia 2017/11/21).

끝으로 하나를 더 든다면 대만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직후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의 직접통화는 미중수교이래 불문율이자 초석으로 여겼던 ‘하나의 중국정책’을 파기하려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미중관계가 심각한 갈등관계가 우려되기도 했지만(Shirk 2017, 20-21) 양국 모두 현상타파적 외교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7년 4월초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미중 양국은 대만문제는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때도 현상유지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요컨대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미중관계의 갈등현안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은 앞으로도 고위층 차원의 ‘전략 및 경제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에 국한해서 보면,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시진핑-트럼프 집권기의 미중관계의 주요갈등으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대만문제, 북핵·사드를 둘러싼 대한반도 정책마찰 등이 예상된다.

### 3.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한국에의 함의

미국의 저명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I. Morgenthau)는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 또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로 규정하고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세계평화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국제정치는 다른 모든 정치처럼 권력투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인간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Morgenthau 1973, 167-172).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 재상을 지낸 팔머스톤 경(Lord Palmerston)은 1848년 한 연설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다만 당연히 추구해야 할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따름이다(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perpetual and eternal and those interest it is our duty to follow)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김강녕 2006, 3). 미중관계도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적대·협력·경쟁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G2 일국인 중국은 미중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①자국의 국내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외부환경조성 필요성, ②중국특색의 책임있는 대국외교의 실천, ③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제, 인권, 사이버안보, 남중국해문제 등 민감현안(이견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이란핵문제, 북핵문제, 전염병, 대테러 등 주요지역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감소하고 양측간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이라는 미국내 우려와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및 태평양-인도전략이 중국에 대한 압박 및 봉쇄용이라는 중국내 인식 등은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외교부 2016, 80).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중국의 동아시아해양패권을 겨냥한 ‘도련선전략’을 수립했지만, 후대 지도자들에게 도광양희(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와 영불당두(永不當頭: ‘영원히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고 미국과 패권다툼을 하지 마라.’는 뜻)를 유훈으로 남겼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은 이를 잘 지켰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를 무시하면서 주변국, 나아가 미중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G2라는 이름으로 세계 양강(G2)이 되어버린 국가들이다.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글로벌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안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해상교통로인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국제정치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두 나라의 경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한국에게는 전략적 관건이기도 하다. 최근 남중국해 제해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두 나라의 강경함은 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도가 만만치 않음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의 문제는 국내여론의 통합, 남북간 군사적 긴장문제를 넘어 결국은 미·중 패권경쟁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미중 패권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물론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의 이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김관옥 2016).

트럼프-시진핑 집권기의 미중관계는 초기에는 상호 ‘전략적 불신’(strategic distrust)으로 인해 ‘강 대(對) 강’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점차 지역별·이슈별로 전략적 갈등과 협력이 일상화되는 복합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문제의 시급성으로 인해 글로벌 이슈(테러·환경·글로벌경제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기조가 우세하지만, 쌍무적 이슈(대만문제·무역-통상·사이버안보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갈등기조가 우세할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전략적 협력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한국·호주 등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을 더욱 심도있게 운용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당분간 현존 패권국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경쟁을 펼칠 것이다.

문제는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 세력경쟁 및 영향력 확대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미중 두 나라가 동아시아 안보현안(남중국해문제·북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 역시 중국이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역내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협’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신중호 2017, 2).

지난 2016년 이후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고 특히 2016년 7월 사드(THADD)체제 배치결정은 양국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한한령(限韓令)<sup>14)</sup>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 양국은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드체제 배치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14일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원칙<sup>15)</sup>에 대해

14) 한한령은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체제 배치문제 결정이후 중국정부가 자국내 중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이다. 금한령(禁韓令)이라고도 한다(통일교육원 2017, 85).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기반을 가까스로 굳혔다(통일교육원 2017, 85-86).

향후 우리는 중국의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더라도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기보다는 한국생존에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기반 위에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은 미·중의 아시아지역 패권경쟁 속에서, 곧 실전 배치될 ‘절대무기’인 북한핵과 마주 서 있는 우리한국이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인 까닭이다(김강녕 2017, 16-17). 우리는 통일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웃인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중첩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은 여전히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우월한 역량과 위상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여전히 미국은 국제질서를 지켜 나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질서에 대해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분야에서 역량과 역할의 확대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려는 ‘팬더(panther)’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억제와 견제에 성공적으로 지키려는 ‘독수리(eagle)’의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이 약진할 수 있었던 데는 덩샤오핑의 성공적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탈냉전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 미중관계가 국제정치무대에 크게 부각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전개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15) 2017년 12월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협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반대,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넷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해결이다(통일교육원 2017, 86).

9·11테러직후 세계적인 반테러전선확대에 따른 협조적 미중관계형성, ②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시 핵심적 협력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확대, ③2012년말 시진핑 체제출범과 미 대통령 오바마의 아시아재균형전략(현 트럼프의 태평양·인도전략)에 맞대응한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신형국제관계)전략’의 추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의 정치·군사협력관계에서 갈등요인도 점차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중관계의 전계과정을 보면, 초기의 통상 및 우호적 관계기→적대적 대결기→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G2시대 전략적 경쟁기의 순서로 전개되어 현재의 트럼프-시진핑시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지난 30여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군사안보, 해양, 무역, 금융, 사이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오늘날 미중관계는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복잡한 관계이다. 현재 미중간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상유지라고 평가하기에는 양국간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하다. 전쟁 또는 현상유지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미중패권경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중관계가 경쟁의 심화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쟁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현상유지라고 평가하기에는 협력의 개연성보다는 대결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 부상과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쇠퇴환경에서 양국간 분쟁적 상호작용은 중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개도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기방어적인 목적의 공세적 행태가 미중간 불필요한 분쟁과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G-2의 ‘강대국’의 정체성을 수용하여 각자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위상에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신형국제관계)’가 중국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중간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국익개념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경쟁적 외교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정체성 규정은 미국의 ‘패권국’ 역할정체성과 충돌하면서 외교·군사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김관옥 2016, 92, 295).

특히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들이지만 기존에 미국통제권에 있던 사안들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중심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현상타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패권과 해양패권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남·동중국해역에 대한 ‘핵심이익’규정은 미국의 지배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김관옥 2016, 291).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계는 트럼프 당선 직후 대만(Taiwan) 총독 차이잉원의 축하전화로 중국측의 격렬한 항의를 초래하는 등 이미 그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이를 정당화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여 중국 지도층으로 하여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했고 한국의 사드배치 등으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미중간 지역 및 전세계적인 전략적 경쟁, 남중국해, 대만,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 등을 감안할 때, 각 분야별 양측간 갈등양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외교부 2016, 80).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별다른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이슈이다. 따라서 미중의 북핵·사드전략은 물론 남중국해·동남아·서남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전략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특히 해상실크로드 추진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이선진 2016, 14). 우리정부는 향후 사드·북핵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한중간 일정정도 갈등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익차원에서 헤징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김재관 2017 159).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라틴 속담에 “현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Sapiens qui prospicit: Wise is he who looks ahead)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외교안보적 과제는 현존하는 국가안보·외교적 위협은 물론 불확실한 안보·외교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대응의지와 능력을 구축·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대응전략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해 나가고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한중 및 미중관계의 호전과 교류·협력의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사드(THADD)와 같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며, 남중국해 해양안보문제 등에 있어서는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전략을 펴나가는 것이 G20 중견국 한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 &lt;참고문헌&gt;

- 김강녕. 2006. 『한반도 평화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 김강녕. 2017.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미치는 영향.” 『월간 자유』 529 (9월): 10-17.
- 김관옥. 2016. “미·중 패권경쟁의 이론적 논쟁 재조명.” 『대한정치학회보』 24(2): 1-26.
- 김명기·김운태. 2000. 『정치학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용구. 2006.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 김재관. 2017.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 『글로벌정치연구』, 10(1): 119-167.
- 김진방. 2017. “시진핑 집권2기: ②중(中)·신형 국제관계’는…도광양희·유소작위 →분발유위.” 『연합뉴스』 (10월 25일).
- 김택연. 2016. “미·중관계와 남중국해 분쟁.” 『아태연구』 23(2): 41-76.
- 김태운. 2009. “미·중간 세력전이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협력질서.” 『아시아연구』 12(1): 33-53.
- 김홍규. 2009.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3(2): 287-305.
- 제임스 스타인버그 & 마이클 오웬런 저·박영준 역. 2015. 『21세기 미중관계: 전략적 보장과 각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박월라·나수엽. 2014.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9월); 1-2.
- 박일훈(朴日勳). 1981. “조미수호통상조약연결까지의 대미관(對美觀)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논문집』 3: 5-36.
- 박재운. 2017. “시진핑은 21세기 중엽 세계일류 군건설 ‘강군몽(強軍夢)’을 천명.” 『국방일보』 (10월 23일).
- 손병권. 2010.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JP정책포럼』, 제36권. 1-19.
- 신상호. 2012. “미·중 제4차 전략경제대화 폐막.” 『연합뉴스』 (5월 4일).
- 신중호. 2017. “트럼프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 및 갈등과 동아시아 과제.” *KIMS Periscope* 73 (2월 21일): 1-3.
- 외교부. 2016. 『2016 중국개황』.
- 외교부. 2012. 『2012 중국개황』.
- 이명식. 1980. “미중관계.” 정인홍·김성희·강주진 편.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 이선진. 2016.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제13회 KIMS 손원일 포럼 발표논문, 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4.12).
- 이수형. 2017. “동아시아 미·중 강대국정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글로벌정치연구』 10(1): 37-65.
- 이지용. 2016.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 역사적 배경과 현황 평가.” 『격월간

- 시대정신』 (3·4월호).
- 이태환. 2013. 『미중관계와 한반도 미래』. 파주: 한울.
- 조혜리. 2015.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한국경제 뉴스』 (10월 30일).
- 주재우. 2017.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파주: 경인문화사.
- 추적 & 박세무 지음, 모경준 옮김. 1993. 『명심보감과 동몽선습』.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 통일교육원. 2017. 『2018 통일문제이해』.
- 한국경제신문·환경닷컴. 2016. 『환경 경제용어사전』.
- 홍찬선. 2011. “중(中),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건설적 성과.’” 『머니 투데이』 (5월 11일).
- Calder, Kent. 2014. “Securing Security through Prosperity: the San Francisco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17(1): 135-157.
- Dower, John W. 2014. “The San Francisco System: Past, Present, Future in U.S.-Japan-China Rela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12(2): 1-41.
- Drezner, Daniel. 2011. “China Isn’t Beating the US.” *Foreign Policy*. No.184(January/ February).
- Fairbank, John King.1983.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urth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nkel, Joseph. 1973. *International Politics: Conflict Harmony*. Harmondsworth: Pelican Books.
- Layne, Christopher. 2009. “The Waning of U.S. Hegemony-Myth or Reality?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34, No.1(Summer): 147-172.
- Mataloni, Lisa. 2011.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Annual 2010(Advance Estimate),”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Release*, BEA 11-02, January 28,
-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NIC.
- Nye, Joseph. 2011.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erseus.
- Rachman, Gideon. 2011. “American Decline: This Time It’s for Real,” *Foreign Policy*, No.184(January/February).
- Susan Shirk. “Trump and China: Getting to Yes With Beijing,” *Foreign Affairs* 96(2), 2017.
- Subramanian, Arvind, “The Inevitable Superpower: Why China’s Rise is Sure Thing,” *Foreign Affairs*, Vol.90, No.5(September/October, 2011): 59-65.
- Harris, Harry B., 2016. “Statement of Admiral Harry B. Harris JR.,



- U.S. Navy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Pacific Command Posture.”(April 26) [http://docs.house.gov/meetings/AP/AP02/20160414/104\\_762/HHRG-114-AP02-Wstate-HarrisA-20160414.pdf](http://docs.house.gov/meetings/AP/AP02/20160414/104_762/HHRG-114-AP02-Wstate-HarrisA-20160414.pdf)(search date: November 30, 2017).
- Wikipedia. 2017. “China - United States Relations”(November 21). [https://en.wikipedia.org/wiki/China%E2%80%93United\\_States\\_relations](https://en.wikipedia.org/wiki/China%E2%80%93United_States_relations)(search date: November 27, 2017).
- Wikipedia. 2017. “Cultural Revolution”(October 10).[https://en.wikipedia.org/wiki/Cultural\\_Revolution](https://en.wikipedia.org/wiki/Cultural_Revolution)(search date, November 30, 2017).
- Wikipedia. 2017. “Taiwan”(October 12)<https://en.wikipedia.org/wiki/Taiwan>(search date: October 12, 2017).
- Wikipedia. 2017. “USS Vincennes (1826)”(October 31). [https://en.wikipedia.org/wiki/USS\\_Vincennes\\_\(1826\)](https://en.wikipedia.org/wiki/USS_Vincennes_(1826))(search date: November 28, 2017).
- 김홍규. 2017.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외교” (5.26),[http://blog.naver.com/jchull22/22101509615\\_5](http://blog.naver.com/jchull22/22101509615_5)(검색일: 2017.11.26).
- 나무위키. 2017. “시진핑”(12.1) <https://namu.wiki/w/%EC%8B%9C%EC%A7%84%ED%95%91>(검색일: 2017.12.1).
- 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2017. “G2(Group of 2)”(11.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6264&cid=40942&categoryId=31657>(검색일: 2017.11.29).
- 위키백과. “미국의 대외관계,” 2017.05.20,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11.27).
- 위키백과. “에드먼드 로버츠,” 2017.11.20.,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11.28).
- 위키백과. “텐안먼 사건,” 2015.09.29.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11.30).
- 人民網 한국어판 [kr@people.cn](mailto:kr@people.cn), 2017.12.3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8년 신년사.”
- 『경향신문』, 1971년 6월 10일; 『한국일보』, 2017년 10월 24일.

투고일 : 2018년 7월 30일 · 심사일 : 2018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8일
---

\* 김강녕은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세계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2013) 외 다수가 있고, 논문으로는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외 다수가 있다.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the U.S.-China Relationship, Pe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pe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early and hostile confrontation period; the relationship of US-Chinese approach/normalization period and the relationship in the 1980s and 1990s; the relationship by mid-2010 since the opening of the G2 era; the US-China relations and major pe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in the era of Trump-Xi Jinping; and conclusion. The rapid growth of Chin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as changed the existing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and has triggere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come the only countries that regularly hol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and the topic has also developed into a country that discusses not only bilateral relations but also global issues. The issues of US-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s encompass global issues as well as bilateral relations issues. For example, the South China S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THAAD, the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and the Taiwan issue. It is not a matter of another country, but a problem that directly or indirectly leads to Korea's diplomacy, security and economy. In order to prevent 'Korea passing' in the US-China relationship, we need a hedging strategy that maintains and strengthens the stro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harmonious promotion of ROK-China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Pending Issues, Trump-Xi Jinping Era, Hedging Strategy